

轉換期 속에서의 企業經營方向

裴 翰 慶

〈서울女大 教授〉

I. 民間主導型 經濟를 보는 各界의 눈

80年 第5共和國 政府가 출범하면서 經濟界는 한국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기조가 民間主導型이 되어야 한다고 強力히 주장하였고 정부도 이 方向으로의 轉換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政府와 經濟界는 이에 대한 뚜렷한 政策方向의 설정이나 自律的인 構築의 努力도 없이 2년여가 지난 現時點에 와서 당면한 不況과 내년도 經濟展望을 놓고 이른바 景氣對策이라는 차원에서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의 차이는 景氣(成長), 物價, 國際收支에 대해 어디에 그 타결 重點을 둘 것인가 하는 소위 「魔의 三角形」에 대한 觀點과 주장의 혼선이며 그 解決手段으로써 金利, 換率의 調整與否와 住宅景氣자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경제에 있어 當面 施策의 範疇로서 景氣, 物價, 國際收支 등 3部門 施策의 모형은 72年의 不況對策 때부터였으며 이 施策에서 當面 不況을 金利, 換率 그리고 住宅建築을 중심한 公共投資의 進작으로 타개하고자 努力하였으나 그 效果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이른바 「8·3 措置」라는 정치적결단에 의한 한국경제의 外科的手術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새삼 72年 不況對策과 「8·3 措置」를 상기하는 것은 당면한 경제난국의 타개에 있어 그 기조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問題에 대해

「民間主導型 經濟로의 轉換」과 관련하여 論議가 되고 있지 않은 감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삼 한국경제가 과거의 政府主導型에서 民間주도형으로 옮겨야 한다면 이는 한국경제가 轉換期에 접어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전환의 앞길을 政府, 企業, 가계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경제계는 民間主導型經濟를 市場指向型經濟로 보고 混合經濟體制 아래서 政府의 計劃이나 規制的인 政策은 價格메카니즘을 補完하는 役割에 限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市場指向型體制下의 企業들은 스스로의 選擇에 따라 行動하고 結果에 대하여 市場의 심판에 복종해야 하며 政府의 개별기업에 차별적인 지원도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經濟運營基調轉換의 요청은 政府 主導型 經濟運營의 경직성, 關勞성 그리고 편중성이 80年代 한국경제에서는 받아들여 질 수 없음에서 구하고 있다. 적어도 理論的인 論理에 있어서는 이같은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기업이 그 머리에 해당하는 經營理念에 있어서 骨格에 해당하는 財務構造에 있어 그리고 胴體와 活動에 해당하는 施設, 勞使關係 및 技術革新에 있어 과연 市場原理에 따라 選擇하고 結果에 責任을 질 수 있겠는지가 문제이다. 또한 오늘날 한국경제의 市場構造가 獨과점체제로 굳어져 있다는 사실에 注目할 때 경제계의 民間主導型 經濟의 主張은 한

국 기업계 전체의 일종의 革命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부는 올해들어 公正去來法을 실시하고 各種 經濟法令들을 整備하여 民間主導型 經濟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또 다른 側面에선 올해 財政規模(中央政府)의 팽창을 경상성장률전망(23.1%)과 거의 맞먹는 22.2% 水準으로 擴大하고 있는가 하면 第5次 計劃에서는 國內貯蓄率 27.4% 중 政府貯蓄을 6.9%로 잡아 77~81년의 5.4% 보다 높게 잡는 등 財政에 의한 國民經濟 관여폭을 더 크게 計劃하고 있다. 끝으로 家計部門의 民間主導型 經濟에 대한 생각은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 이상 더 희생을 당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80年以後 繼續 實質賃금이 負의 伸張(80년, -4.7% 81년, -4.8%(展望))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독과점구조 아래 所得配分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데서 類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과거의 高成長의 利得은 재정과 기업이 향유하였고 결과적으로 惡性인플레이션의 피해만 가계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可能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事實을 종합해 볼때 한국경제는 民間主導型 經濟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담당할 主體가 없는 狀態이다. 여기에 당면한 「스태그·플레이션」深化的 構造的인 長期沈滯傾向을 맞아 등장한 것이 經濟의 安定基調를 구축하기 위하여 「苦痛을 分擔해야 한다는 이른바 苦痛分擔論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한국경제 각 部門의 赤字經濟의 元凶은 인플레이션에 있기 때문에 이를 收束할 때까지 財政規模의 縮小, 企業赤字의 自體解決 그리고 가계의 消費緊縮으로 견디어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설불리 景氣回復을 시도했다가는 그에 앞질러 인플레이션이 준동할 可能性이 있으니 인플레이가 진정될 때까지 不況을 견디어 내자는 것이다. 現下 景氣論爭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 韓國開發研究院은 「1982年 經濟政策의 基本課題」의 마지막 結論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政府·企業·勤勞者·農民 등 各界各層이 自己 몫을 지키겠다는 目前的 利益만을 추구할 경우 結果의으로는 인플레이가 加速되고 오히려 全體 生産

과 所得이 감소할 뿐 아니라 自己利益을 지키겠다는 本來의 의도마저 失敗로 끝나는 惡循環을 되풀이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韓國經濟의 現狀診斷과 方向提示는 오늘날 韓國經濟에 있어서는 自己利益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당면 不況을 돌파 해 나갈 確固한 主體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으며 不況의 克服은 經濟의 自然的인 치유력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II. 國民經濟와 民間企業

오늘날 韓國經濟는 분명히 資本主義的인 秩序 아래서 순환되고 있고 混合經濟體制的인 運營 방식에서 政府和 企業의 役割이 모호해져 일종의 無重力狀態에 있는 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危險한 狀況이다. 왜냐하면 資本主義的인 産業社會의 發展은 다원적인 自己利益의 추구가 競爭을 통하여 형평을 유지해 가면서 政府, 企業 어느 先導主體에 수렴되기 마련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前記 韓國開發研究院 報告書는 앞에서 인용한 韓國經濟의 方向提示 結論에 이미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即 「不可能한 追求 대신 우리가 處한 立場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安定的成長을 達成하기 위한 “國家政策에 대해 國民 모두가 信賴를 갖고 協調”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모든 階層의 實質所得이 均衡的으로 增加할 것이며 또한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國際競爭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注目할 것은 「國家政策」의 性格이 政府主導型的 것인지 民間主導型的 것인지 不分明하다는 점이다. 國家政策의 巨視性을 고집한다면 아직도 韓國經濟는 政府主導的으로 運營되고 있고 企業經營的인 微視性을 질게 하면 民間主導的인 經濟運營基調의 구축정책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以下 同報告書가 提示한 政策方向을 檢討해 보기로 하자.

韓國開發研究院도 1982年 經濟政策의 基本課題를 國際收支, 物價安定 그리고 成長의 「魔의

三角形」의 해결로 接近하고 있다.

첫째, 82年 韓國經濟의 國際收支赤字幅은 45억弗水準이 유지되어야 하며(理由: 世界高金利推勢로 82年의 利子支給이 40~45억弗 線에 이를 것으로 展望되며 45억弗 이상의 赤字를 許容하면 國際信認度유지에 문제를 야기할 可能性이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하여 ① 技術革新 生産性向上 등을 통해 産業의 國際競爭力 確保 ② 短期的으로는 價格競爭力을 維持하기 위하여 (a) 各種 國內原價上昇要因의 最少化 (b) 달러貨 強勢를 反映하는 換率의 伸縮的 流動化 ③ EC地域 등 輸出不振地域에 대한 特別支援講究 등을 提示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長·短期 國際收支改善對策은 주로 82年 國際景氣의 不透明한 展望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問題는 長·短期對策 중에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問題이다. 現在論難의 초점이 되어있는 것은 換率의 伸縮的인 流動化이며 그 換率上昇의 幅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하는 점(KDI 推定 4%線)임은 主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소위 韓國輸出企業의 價格競爭力支持를 위하여 換率, 輸出金融支援 등을 強化한다면 換率引上과 物價의 相互 惡循環 可能性이 짙어지며 모든 企業의 외자상환부담가중 등은 일시적인 輸出增大效果와 함께 輸出企業은 물론 여타기업의 經營체질을 더욱 더 惡化시킬 뿐 아니라 정부가 輸出企業을 이끌고 가야할 政府主導型 輸出體制의 負擔은 더욱 더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면 民間主導의 比較優位에 의한 産業的인 國際競爭力強化는 한낱 口號에 그치고 말 可能性 조차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韓國經濟의 對外信用問題가 걸린 국제수지적자폭 擴大 可能性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다.

여기에 장기적인 國際競爭力強化와 短期的인 國際收支赤字幅 改善을 民間企業 主體로 하여 達成해야 하면서 政府政策은 그 환경정비에만 努力해야 할 난제가 생겨 나는 것이다. 따라서 結論만 提示한다면 첫째, 당면한 韓國의 國際收支 問題가 國際的 信任에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주로 外資償還壓力에 기인한 것이라면 이는 政府가 積極적인 經協外交를 展開하며 우선 國

家和 國家의 經濟關係에 금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輸出企業의 非價格競爭에 의한 輸出 增大에 있어 國內 經濟團體들이 이미 形成하고 있는 소위 經濟使節團 交流를 中心한 民間經協機構의 運營을 오늘날과 같은 한낱 사교모임이나 國內企業이 外國企業의 支援을 얻어내는 狀態로 運營되는 것을 철저히 分析 改善할 必要가 있다. 즉 이를 실질적인 海外마케팅의 常設的인 채널이 되도록 그 體質을 改善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각 民間經協機構別로 수출目標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方案이 될 것이다. 세계로 民間輸出企業들로 하여금 技術革新, 生産性向上을 통한 比較優位를 實現시키기 위해서는 現行 輸出金融支援을 稼得率, 海外市場占有率 그리고 國別 輸出去來의 長期, 固定性 등에 基準을 두어 철저히 改善함으로써 이른바 目前의 輸出金融을 따기 위한 赤字·出血輸出은 과감히 脫皮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換率의 조정문제는 장차의 물가 파급도 문제이려니와 모든 企業의 外資償還負擔의 加중→ 資金需要의 增加→ 企業財務構造의 加一層 惡化가 되지 않게 하는 企業의 全體經營의 觀點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금후 韓國의 國際收支의 問題는 輸出·輸入 그리고 外資導入에 있어 企業이 經營의 次元에서 責任지고 감당해 낼 수 있는 民間主導型 對外經濟 適應 基調를 마련하는데 주안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成長·景氣對策으로는 82年 國內景氣가 世界景氣回復 國際收支制約 그리고 物價安定度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고 이에 對應할 當面 施策으로 ① 住宅需要促進을 爲한 特別對策 ② 國際金利 및 國內物價上昇 추세에 맞춘 公金利 下向調整 ③ 生産性向上을 위한 投資促進 ④ 産業支援制의 再 整備를 통한 比較優位産業支援 強化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중에서 公金利部 門은 贊·反兩論이 분분하더니 11月 9日에 1% 引下措置가 단행되었다. 이처럼 小幅的인 金利引下의 理由로서 當局者는 金利政策을 從來와 같은 景氣對策的인 政策變數로 보아 引下한 것이 아니라 價格媒介變數로 보아 最近의 物價安定 傾向과 國際金利의 下落을 감안한 것이라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現
在의 物價安定 추세는 단적으로 표현하여 企業
의 赤字販賣와 國內消費沈滯의 上昇作用의 結果
라는 점이며 당장의 金利水準의 시비는 금리가
높아 投資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企業의 既
存財務構造 아래서 그 취약성을 가중시켜 原價
壓力으로 作用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도 景氣展望과 관련한 金
利引下政策은 先物價下落·後金利引下の 원리론
적인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金利引下→限界狀
況의 企業財務負擔의 緩和→原價引下→ 物價安
定の 유발효과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 國
民經濟 各 部門이 苦痛을 당하고 있는데 金利의
계속적인 인하는 企業部門만 고통을 緩和시켜
주고 더 나아가 더 높은 間接金融依存을 結果
하여 長期的으로 볼 때 자칫 企業을 구제할 수
없는 不實의 事態까지 끌고 가는 結果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確實히 一
理있는 주장이다. 問題는 國民經濟的인 파국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는 초점은 앞으로 企
業이 과연 生産性向上을 主軸으로 하는 比較優
位企業이나 産業이 되도록 철저한 經營合理化의
內實을 어떻게 거두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健全한 景氣回復을 위해 앞에서 말한
技術開發·生産性向上을 근간으로 하는 企業의
投資促進을 어떻게 유도하느냐, 또 現在 企業이
안고 있는 낮은 稼動率 過剩比率의 부담을 가
시게 할 內需市場擴大를 위한 적절한 資金政策
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結論부터
말한다면 實質通貨供給을 늘리되 이를 몽땅 財
政이 잠식하지 않도록 이른바 資金供給의 實物
生産效果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어차피
政府主導에 의하여 韓國經濟를 끌고 가지 않을
바에야 企業으로 하여금 國民經濟를 끌고 가도
록 要件을 조성해 주고 그 責任履行與否는 政
府가 國民의 立場에서 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韓國開發研究院은 物價安定을 위하여
① 각 階層의 높은 인플레 期待心理내지 과거
인플레에 대한 補償要求 자제 ② 政府, 企業, 勤

勞者, 農村家計의 各種 支出抑制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초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임금수준의 問題와 財政抑制의 可能性에 관한
것이다. 開發研究院은 오늘의 한국인플레이션을
「코스트·풋쉬」型으로 分析하고 80~81年平均
구매자가격 상승률 26.2%에 대하여 輸入物價
9.4%, 國內費用要因 16.8% (비농가인건비 6.9
%, 농가인건비 2.3%, 資本費用 7.0%)로 밝
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늘의 韓國經濟는 國
際市場에서 物價는 잘 안팔리고 대신 輸入인플
레이션 壓力만 받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 오래
전에 過多海外依存型 工業化를 경고했을 때 미
리 앞을 내다보고 政策과 企業의 長期經營計劃
을 마련하지 못 하였는지 후회될 따름이다.

다음으로 인플레壓力에 대해 資本費用壓力이
인건비상승 壓力을 앞지르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韓銀의 企業經營分析은
企業의 總費用에 대한 人件費의 比重이 77年
의 10.45%에서 78年 12.70%, 79年の 12.62
%를 거쳐 80年の 10.14%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金融費用比率은 77年の 4.89%
에서 연차적으로 높아져 80년에는 7.0%로 급
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오늘의 韓國企業에 대한 內·외의 商業的인 金
融資本의 寄與의 度가 높아가고 이것이 物價에
轉嫁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生産的 勤勞者의 賃金安定을 호소
함은 자칫 金利生活者에 勤勞者가 俸仕하라는
壓力이라고 비난받을 可能性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實質賃금이 負의 狀態로 잠식 당하고
있는 일반勤勞者의 家計는 消費節約의 호소라는
倫理的인 要求를 받아들일 만큼 恣意餘유가 있
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總體的인 需要抑制
가 특히 農家所得의 상대적저위의 不均衡속에
얼마만큼 效果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며 오늘의
內需市場需要沈滯은 일차적으로 소비가 층속된
階層에는 所得이 더 몰리고 소비의욕이 있는 階
層에는 所得이 줄어들고 있지않나 생각된다. 요
컨대 長期物價安定의 方向은 코스트요인을 어
떻게 제거하느냐에 달려있고 이는 生産性向上

과 기업으로 하여금 規模의 經濟에 의한 生産費 引下를 實現할 수 있게 하는 일차적인 內수시 장 擴大를 위한 需要의 平準化에서 해결의 실마 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Ⅲ. 國民經濟를 책임지는 企業經營

오늘날 한국경제는 政府主導型 經濟에서 民間 主導型 經濟로 옮겨가는 過度的인 轉換期에 놓여 있다. 한편 景氣狀況이나 展望은 企業으로 하여금 要請받고 있는 減量·內實經營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韓國企業이 부딪친 진퇴유곡의 골짜기라 할 것이다. 狀況이 위급 할 수록 진단은 正確해야 하고 처방과 시술은 빠를수록 좋다.

이와같은 논거에서 「轉換期속의 企業經營方 向」에 대해 나름대로의 처방을 다음과 같이 열 거해 본다.

첫째, 韓國企業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대하여 責任을 지고 이를 이끌고 나가는 主體가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72年 「8·3措置」와 같은 비 상조치에 의해 기업이 구제될 시기는 지났음을 明確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는 政策的인 판 단이나 能力을 따지기 이전에 오늘의 한국의 企 業規模와 국민적인 이해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 어 있지 않다는데 연유한다.

기업은 과거와 같이 정부의 높은 경제성장목 표에 경영을 내맡기는 타성을 철저히 불식하고 개별기업의 성장이 경제성장을 사후적으로 결정 짓는다는 기업경영의 기본전제에 대한 의식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은 長期經營計劃에 입각하며 생산 성향상에 따른 長期正常利潤 確保에 경영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현대 기업에 있어 利潤없는 企業의 長期成長이란 現實性을 무시한 공론이며 장기성장을 겨냥하지 않은 단기이윤의 집착은 現代 企業의 사회적 조립기반을 스스로 허무 는 결과를 초래 할 따름이다.

따라서 80年代를 向하는 한국 기업은 長 期利潤이 시장경쟁을 통한 社會的 報償의 결

과인지 아닌지 특히 最高經營層에서 理念的인 經營目標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 이다. 이같은 經營의 社會的 目標을 소홀히 한다면 創意와 革新에 입각한 市場機能을 통 한 企業活動이라는 民間主導型 經濟에 대한 기업의 주장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 당면 한국기업은 그 內實을 다지기 위 하여 開放型 擴大經營에 대하여 一定한 期間 調 整을 해야 할 것이다. 80年 한국경제전망에 대 하여 가장 큰 念慮의 狀況이 되고 있는 것은 輸出目標의 達成與否이다. 그렇다고 하여 換率 을 올리고 輸出金融比重을 높여 輸出이 長期的 으로 伸張하던 시기는 지난것 같다. 왜냐하면 換率引上이 外資償還負擔의 加重과 原價高의 加 重으로 되돌아오고 輸出支援金融은 企業의 現 財務構造가 投資에로의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 이다. 결국 이는 企業의 국내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內 市場에 있어 市場競爭 體制確保를 위한 財務·生産·販賣의 면을 총점 검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이제까지 한날 空論 으로 맴돈듯한 감이 있는 技術革新, 生産性向上 등 國際競爭의 非價格競爭力을 배양하기 위하여 기업은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한 국기업은 이제 國際化에서 後退하면 존립자체가 위험당할 정도로 生産·販賣·財務에 있어 빠져 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勞使關係 의 近代化 내지는 正常化에 각별한 관심을 기 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勤勞階層은 한 기업에 있어 생산을 담당하는 경영적요소 이 기도 하지만 산업사회의 한 社會階層이기 때문 이다. 이들의 관심 욕구는 한국산업사회의 발전 에 따라 진전한다. 그것은 한 기업의 경영요소 적인 階層으로 머물러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 서 賃金水準·作業環境·福祉與件 등 이른바 勞使 關係는 個別企業의인 입장과 전체산업사회적인 관계를 조화시킨 가운데서 近代的으로 형성되 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80年代 한국기업경영의 方向은 「社會 的 公器」가 어떠한 經營의次元에서 그 機能이 俱現되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